

이슈브리프



- 정부 3.0과 여성정책
박성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젠더의 시각에서 지역사회 공간 보기
최유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여성의 삶: 공식지향과 삶의 실제
임순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 3.0과 여성정책

박 성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정부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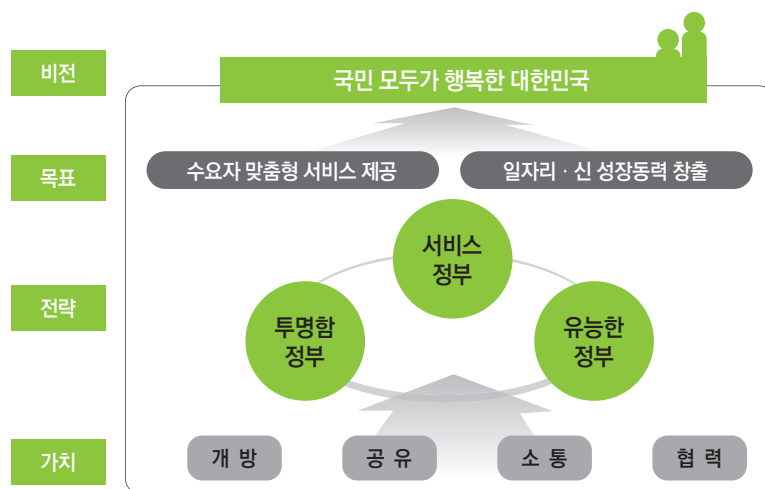
스마트 기술의 혁신은 산업, 생활방식, 사고방식, 인간관계,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제반 영역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ICT 신기술이 1.0, 2.0, 3.0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사회와 정부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3.0을 지향하는 변화를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ICT기술 3.0이 초래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정부3.0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정부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즉, 미래 사회가 스마트 사회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도 변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로의 변화를 통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정부3.0이란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정부3.0의 목표는 ‘수요자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이며, 중점 과제로 정보 공개, 부처 협업, 수요자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이며, ICT기술은 핵심 수단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정부3.0은 정부가 국민에게 데이터와 정보를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이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정책 관련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참여와 협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체제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체제가 아닌 수요

자인 시민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수요자중심 또는 수요자맞춤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공개, 소통, 참여 촉진은 결국 수요자인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이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가치도 창출될 수 있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3.6.19),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p.5.

[그림 1] 정부3.0 비전과 전략

II. 정부3.0과 수요자맞춤 서비스

정부3.0에서는 시민이 정책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됨과 더불어 정부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도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더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1.0,

2.0에서의 수요자맞춤 서비스가 정부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기획해서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패러다임이라면, 정부3.0에서의 수요자맞춤 서비스는 개방된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수요자가 스스로 맞춤 서비스를 찾고 요구하며, 서비스 개발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도 있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와 소통할 수 있고, 서비스에 참여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다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부3.0의 가치와 전략을 여성가족정책에 적용할 때, 결과적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 수요자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참여와 협업을 확대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여성정책에 투영되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경제 구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3.0에서 수요자맞춤 서비스의 방향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의 개방은 시민이 정책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오픈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시민들도 정보에 접근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탐색,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

둘째, 3.0 정부에서는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집단별 정책 요구(needs)를 더 구체화, 세분화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개방된 정보의 활용으로 수요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정책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한 정책요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검하여 정책 수요와 서비스 간의 격차 그리고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수요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3.0 정부에서는 시민이 정책서비스 개발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참여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ICT기술을 활용해 소통의 방식과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소통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참여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수요자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만이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시민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방된 정보를 토대로 민간도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채널을 다양화하고 수요자의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 수요자맞춤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정부가 개발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개발과 활용이 자유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수요자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부처 간 서비스를 연계, 통합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부 부처의 정책영역별로 서비스가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수요자에게 분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개인별로 통합된 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별로 필요한 정책요구를 파악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3.0서비스의 가치와 전략을 통해 좀 더 수요자의 관점과 요구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서비스로 다다갈 수 있을 것이다.

III. 여성가족정책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

여성가족정책에서도 정부3.0의 가치와 전략을 활용하여 수요자맞춤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정책에서 개방, 공유, 소통, 참여, 협업 등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하고, 수요자맞춤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1. 여성가족정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정부3.0의 가치와 전략을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데이터와 정보의 개방과 활용

- 활용성을 고려한 속성 데이터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보공개목록과 원문 자료의 연계
- 정보공개 대상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 부처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

나. 소통과 참여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사용자친화적 개편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위민넷의 접근성 제고 및 소통 활성화
- SNS 콘텐츠 및 앱 개발로 시민의 흥미와, 소통 유도
- 취약계층 여성과의 소통 확대
- 정책 반대집단과의 소통

다. 협업

- 사업기획,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제도와
- 부처, 민관 협업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 민관협력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여성가족정책 정보서비스 플랫폼 운영

2. 사업 개발을 위한 대상 선정

또한 여성가족정책3.0 서비스를 위한 신규 사업 개발, 기존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 개발을 위한 정책대상과 영역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3.0의 핵심이 데이터 개방이므로, 여성가족부 사업 중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의 관심이 큰 이슈, 정책요구가 많은 이슈를 고려한다. 수요자들이 서비스 기획, 시행,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 이슈를 택해야 소통과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3.0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서비스에 3.0 전략을 접목시켰을 때 사업성과가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클 것이다.

넷째, 스마트 기술을 통해 데이터와 정보에 잘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타깃으로 하면 소통, 참여, 정보를 활용한 가치 창출 등 3.0 서비스의 효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정부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사업 개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기준은 3.0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에 부응한다. 즉,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선정의 기준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선정된 사업이 모든 기준에 모두 해당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하나의 기준에서라도 3.0서비스로의 개선효과가 기대될 경우 적합한 대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업개발 전략

사업대상과 영역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슈브리프

전략 1 : 데이터와 정보 개방, 공유

- 1-1. 여성가족정책, 여성가족부의 어떤 데이터와 정보를 개방해야 하는가?
- 1-2.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
- 1-3. 데이터와 정보는 어떻게 활용을 증진할 것인가?
- 1-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전략 2 : 소통과 참여

- 2-1.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기존의 소통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2-2. 시민의 정책 참여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전략 3 : 협업

- 3-1. 어떤 사업에서 부처의 벽을 허물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3-2. 민간이 서비스에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 3-3. 민간 참여를 통한 가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3.6.19.).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자료.

박성정 · 신선미 · 장미혜 · 홍승아 · 김동식 · 권소영(2014). 여성 · 가족 정책의 수요자맞춤형 정부3.0 서비스 전략 연구. 여성가족부.

박성정 · 김복태 · 안상수(2013). 정부3.0에 따른 여성가족정책 서비스 대응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¹⁾

송 효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05년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편제되었던 종전의 호적법과는 달리,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고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²⁾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나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호주-호적제도의 잔재와 개선방안

□ 등록기준지

1) 문제점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면서 종전의 본적(本籍)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가족관계등록

1) 이 글은 ‘송효진 외(201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2) 박복순 외(2007),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 법원 결정 기준, 종전 호적과의 연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기능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등록기준지의 변경이 자유롭다 하여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된 후 출생하였거나 종전에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전 호적상의 본적을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출생한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姓)과 본(本)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부성(父姓)우선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맞물려 등록기준지도 여전히 부(父)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전히 종전 본적지가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새로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부(父)의 등록기준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기능적 개념에 내포하지 않아도 될 ‘가(家)’와 ‘부(父)’ 중심의 호적제도하에서의 본적 개념이 사실상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호적제도 하에서 뿌리 깊게 생활상 관념상으로 지니고 있는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관 극복을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이에 등록기준지를 폐지하는 ‘등록기준지 폐지안’ [1안]과 호적제도와와의 매개를 위해서만 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증명서상으로는 현출할 때 표기하지

않는 ‘등록기준지 현출 제한안’을 [2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한편, 비송사건관할 중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는 규정은 모두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등록기준지를 폐지하지 않고 [2안]에 의할 경우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롭게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 뿐 아니라 전국의 시(市)·읍·면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변경신고가 더욱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생의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

1) 문제점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등록부예의 기록과 증명서를 통한 공시에서의 ‘가족’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가족의 범주를 의미하는 프레임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식에 작용한다. 이는 오랫동안 호적상 ‘가(家)’ 개념에 익숙해왔던 국민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현출되는 사람이 법이 의미하는 가족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 현행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서의 명칭을 “가족관계”로 하고 있으면서도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와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한다.

2) 개선방안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사람의 범위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로서 “부부와 부모·자녀 관계”가 기록 사항이다. 부부관계는 현행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 가능하므로 부모·자녀관계, 즉, “본인·부모·자녀”만을 기록 현시하는 증명서로 발급하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없이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이에 누구나 증명서 상의 기록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녀관계증명서”³⁾로 명칭 및 증명서의 종류를 변경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신분등록제도로서의 기능적 취약성 문제와 개선방안

□ 출생신고체계

1) 문제점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신분등록·공시제도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등록진실주의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부분은 구(舊) 호적법상에서의 제도에서 거의 변화된 바 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호적제도 시행시부터 허위의 출생신고가 빈번히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사비송건의 양산 및 불법·탈법적 입양이 가능한 취약한 출생신고체계가 큰 변화 없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비혼부가 자의 출생신고를 할수 없거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까다로운 절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2) 개선방안

① 출생통보제도의 도입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⁴⁾

② 인우증명에 의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

인우증명제도는 폐지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소가 발급한 출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⁵⁾

③ 미혼부(父)에 의한 자(子)의 출생신고 절차의 개선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체법인 민법의 친자(親子)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면 행정적인 정책보완을 통해 신생아가 신고지연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생신고에 있어 유전자검사결과를 첨부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신속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 일부사항증명제도

1) 문제점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가장 큰 논란이

3) 현행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증명서로 개정하는 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90,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으로 2013. 5.9. 발의된 내용임.

4) 출생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예로는 프랑스(프랑스 민법 제55조 및 제56조, 독일(독일신분등록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미국 등

5) 출생신고의 인우보증제를 대신하여 보건소 등 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임(김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493, 2013.8.22.;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494, 2013.8.22. 발의).

되었던 것이 증명서상에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과도하게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였다. 이에 일부사항증명제도가 도입되어 2011년 12월 30일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일부사항증명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일부증명서를 거부하고 전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새로 도입된 일부증명사항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부증명의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사항 증명서에 ‘일부’ 증명이라는 사항이 기재되는 점, 또한 재혼 가정 · 이혼 가정 등에서 외부에 공개하기에 민감한 사항인 자녀에 관한 사항은 일부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

2) 개선방안

① 일부사항증명제도의 원칙화 및 증명서의 명칭·종류 변경

증명서 발급형식을 현행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사항증명 방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라는 명칭이 주는 불필요한 오해 및 이용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증명서의 명칭과 종류를 현재의 상태만을 나타내는 “일반증명서”와 변동사항이 표시되는 “상세증명서”로 개선한다.⁶⁾ “상세증명서는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다”.⁷⁾

② 증명서에 현출되는 사항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증명서 사항을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선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사항까지 현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사용 용도별로 필요한 사항만 증명할 수 있어 증명서 활용 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제안한 상세증명서에 현출되는 사항은 사용용도에 맞게 신청자가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부청구권자의 범위

1) 문제점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교부청구권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등”이라는 약어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그 범위는 넓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7월 30일 신설된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그 범위를 다소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무인증명서 발급기에 의하는 경우 “본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더욱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의 제14조 소정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되어 있는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도 더 제한하는 것으로 함께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개명, 성별정정 등 민감한 변동사항이 현시되는 기본증명서의 경우 본인에게만 교부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본인 외의 교부청구권자에게 목적 외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는 주의 규정조차 없는 것도 문제이다. 법 제14조 제5항에 증명서제출을 요구하는

6) 김상용, 2013.10.28. 본 연구에 대한 서면자문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7) 김상용(2013),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7면.

자로 하여금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친양자관계증명서의 교부와 관련한 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 제14조 제1호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경우 친양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면개정된 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항에 의하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양친의 동의를 받아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의 조항 간에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호에서 혼인 당사자가 친양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목적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혼인당사자”의 개념도 불분명하거나, 민법 제809조 소정의 근친혼의 방지 목적이라면, 근친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여부”로 확인케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교부를 해주는 것은 지나치다.

2) 개선방안

① 교부신청권자의 제한

일반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는 신설된 법 제14조의 2(인터넷증명에 의한 증명서발급)에 의하면, 소정의 교부청구권자와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가능하도록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무인발급의 경우는 신설된 규정 그대로 유지). 상세증명의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으로만 교부청구권자를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증명서의 교부에 있어 본인 및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에게만 교부청구권을 한정하는 발급제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 문제의 개선

친양자관계증명서의 경우 혼인당사자를 교부청구권으로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혼인당사자가 담당공무원에게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해서 원칙적으로 성년자만이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동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한다)⁸⁾.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규정은 입양특례법과의 균형을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친양자입양신고시 친생부모의 정보공개동의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친생부모는 정보공개동의여부에 대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③ 주의·제재 규정 신설

본인 외의 교부청구권자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받은 증명서를 정당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겠으며, 이의 위반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 문구를 신청서에 삽입하여 서명토록 신청서식을 개선해야 한다.

⁸⁾ 여기에는 친생부모의 익명성의 보장과 입양아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간의 법익의 조정이 필요하다.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규정 역시 신설되어야 한다.

(4)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다문화·국제가족관계등록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 사회의 다수의 정형화된 가족, 소위 ‘정상’ 가족 내지 ‘전형’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신분등록제도 체계는 소수자 및 다양화되고 비정형화된 가족과 개인을 소외시키고 인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체계도 재고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배려한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혼인외의 자(子)의 인권보호

1) 문제점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있어서는 출생신고시에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자’인지 ‘혼인외의 자’인지를 표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신분상의 잔재를 내포하는 법률용어의 사용은 단지 인지와 관련하여 편의상 ‘구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법상 차별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한다. 이는 한부모 가족, 비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개선방안

출생신고 기재사항 및 출생신고서식에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구별을 삭제하고, 출생신고서식에 혼인외의 자는 인지가 없는 경우 모(母)만 표기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인지가 있으면, 부(父)를 기재한다. 부모의 혼인여부는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구태여 자의 출생시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는지를 신분상의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용어로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⁹⁾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1) 문제점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절차 관련한 문제가 있다.¹⁰⁾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증명서에는 ‘북한출신’임이 명기되는데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채용 시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신분노출로 인한 신변의 안전 위험성 증가 등이 문제된다. 그 외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이혼 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서울가정법원’만을 지정하여¹¹⁾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개선방안

기본증명서에 북한이탈주민임이 드러나는 문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창설 등의 기록사항

9) 다만,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분에 따른 인구 통계자료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가 되는 기능을 하기도 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단독권자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쪽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통계를 생성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10) 북한이탈주민의 중혼 및 혼인해소의 문제는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3항.

등을 제외하고 작성된 “일반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에 의한다면,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족관계등록 및 이혼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서울가정법원만을 지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1) 문제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특별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마찬가지로 정정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하여서는 두 차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¹²⁾을 통하여, 성별정정허가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어왔고, 이를 반영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에서 성별정정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상 성별정정허가기준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성전환수술 요건,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소극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환수술 요건은 성소수자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리의 전환 및 논의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 허가신청시 성년자인 성전환자에게 부모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도록 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점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이다.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성(性)이

전환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에 변경 이전의 성(性)과 현재의 성(性)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성별변경의 여부가 사회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성별이 표기되는 것 역시 자(子)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이어진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는 성별정정을 신청하면서 같이 개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명허가신청 관할법원은 주소지 기준(재외국민, 주소지 없는 자는 등록기준지)으로 하는 반면, 등록부성별정정은 관할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어(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제1항, 동규칙 제87조 제4항)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다른 경우 다른 법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 역시 지적된다.

2) 개선방안

성별정정을 위한 예규상의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정정신청 첨부서류에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동의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성별정정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은 앞에서 제안한 개인정보보호의 개선안에 준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소정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가족관계증명서(이글에서 제안한 안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성별 표기는 삭제하여야 한다. 성별정정신청과 개명신청 관할지가 각각 달라서 불편했던 현행 비송사건 관할지 규정은 일괄 주소지로 변경되어야 한다.

¹²⁾ 대법원 2006.6.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9.2.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 다문화·국제화시대의 가족관계등록제도

1) 문제점

우리사회가 다문화·국제화되어감에 따라 다문화·국제가족관계등록업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문화·국제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외국인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해당국의 발음(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는 달라 두 증명서에 나타난 외국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 각 나라별로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 및 양식이 국내와 달라 발생하는 문제,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기관에서 업무처리상 겪는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가족관계등록 관련한 운영에 있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는 운영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여권상의 영문이름의 병기

외국의 인명 표기의 경우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조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청서상 인명표기를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예규를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이와 함께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국제가족관계 업무 운영 절차상의 개선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해 국가별 표준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바¹³⁾, 가족관계등록 영문증명서 발급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현 지자체의 영문 증명서는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가족관계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재외공관과의 인트라넷 구축 등 긴밀한 업무협력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상용(2013), “가족관계등록법 워크숍 서문자문의견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10.25.)

박복순·전혜정(2007),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법·가족관계등록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정환(2013), “출생신고체계 개선방안”,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화-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집 토론회

박정환 외(2000), 「출생 및 영유아 신고체계개발-출생 및 사망 전산신고체계」, 보건복지부

송효진·박복순(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 서귀포시, 서울 중구, 군포시, 광주 북구, 대구 달서구청, 수원 장안구 등(해당 관공서 홈페이지 참조)

젠더의 시각에서 지역사회 공간 보기¹⁾

최 유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친화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 붙여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동네 한 바퀴 사업은 여성친화 1호 도시인 익산에서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친화 서포터스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공원이나 시 전역의 골목들을 유모차를 끌거나 걸으면서 낮낮이 차를 제거하여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든 사업이다. 이후 야간 안전을 위한 동네 한바퀴 사업 등으로 확산 되면서 여러 도시들에서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도 개선, 보행등 설치, 야간 안전 동행 사업 등이 만들어졌다. 물론, 화장실, 주차장 개선 사업도 활발 했고, 공원 등에 범죄예방설계를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안전과 보행 편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이 성 평등과 어떤 연계가 있을까 또는 어떤 공간 개선이 지역 사회 성 평등을 촉진시킬까와 관련된 의문들도 함께 이슈화되었다. 본고는 “모든” 범주에 걸친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의 생산은 지역 여성의 성 평등 증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여성의 공간 이용 행태와 생활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정주 여건 또한 젠더화되어(gendered city) 있다.

도시에 어떤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들의 삶의 방식은 차별적으로 구성되고 경험된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경사로의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지, 계단

1) 이 글은 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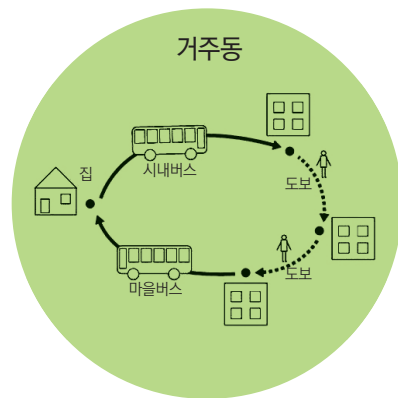
이슈브리프

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라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방문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된다. 때로는 데이케어 센터가 집 주변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 사용은 차별적이 된다. 차별적인 경험은 건축물과 지리학적 범위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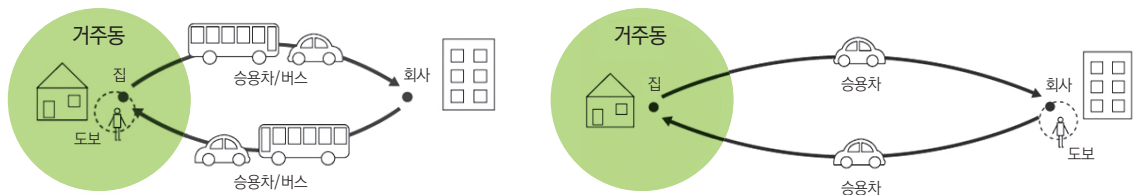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공간의 구조와 배치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생활시간을 이용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유발한다. 현대 도시 공간은 애초의 설계부터 이동에 의존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다. 도시계획에서는 생활 기능별로 분리된 도시환경을 건조해왔다.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구분하고, 도로교통망으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주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간 구조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에 중심을 둘 때, 도시 공간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의 편익을 기준으로 설계 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는 취업 여부와 돌봄의 역할에 따라서 도시 공간의 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전업 주부는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내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 동반 보행이 상대적으로 많고, 단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형태로 이동하는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반면, 취업자 집단은 거주지를 벗어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여성은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출퇴근하고 있다. 이동 패턴에 있어서도 취업 남성은 상대적으로 긴 이동거리를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고 직장 주변에서 주 보행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취업여성은 상대적으로 근거리 취업이 다수이며 대중교통 이용자도 많으며 거주지 주변 근거리 보행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패턴의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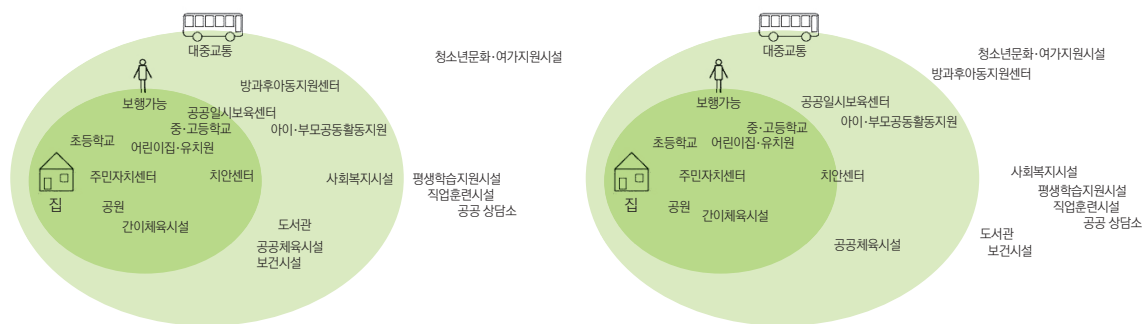
[그림 1] 전업 주부의 이동 패턴



[그림 2] 취업 남성(왼쪽)과 여성(오른쪽)의 이동 패턴

도시 구조 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요한 기능에 따라서도 거주자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제조업 부문은 중심으로 한 용도 구분과 교환가치, 산업화에 기반한 공간으로 발전된 도시에서,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 인간의 생존과 다음 세대 양육은 생산을 지원하는 기능에 비해 부차적인 기능으로 격하되어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과 생산 부문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과 보육과 쇼핑, 공공서비스 간의 근접성에 대한 무관심은 성별·이동과 돌봄에 특수한 집단별로 생활기회에서의 차이를 유발한다.²⁾

여성친화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근거리 이용 가능 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돌봄 관련 시설의 원거리 배치와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 남성은 자녀 유무가 시간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유자녀 취업여성은 취업여성 평균과 비교해서도 개인관리, 일 혹은 학업, 관계, 문화여가 시간 사용 감소분만큼 가사 및 돌봄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3] 대도시(왼쪽)와 소도시(오른쪽) 거주자의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

돌봄 인프라의 다양화와 근거리 위치 등이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공간 설계는 돌봄 의무가 있는 취업여성의 생활기회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가구의 경우는 공공 기관 접근성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바, 도시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거지 등의 여건으로 접근 기회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 균형 잡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공공서비스, 사회적 접촉을 거두고 있는 동 내부에서 충족시키는 것, 둘째는 각종 삶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심부까지 이동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화된 돌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그간 우리 사회에서도

2) 기능별로 분리된 도시 공간은 교통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낮은 아이들,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주민들은 도시공간에서 사회적 접촉에 대단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주로 여성들)은 일상의 다양한 일(직장, 보육시설에 아이 맡기기, 쇼핑, 여가 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Monika Jaeckel & Marieke van Geldermalsen, 2005). 낮은 이동성이 장애가 될 수 있는 도시 공간의 구성, 즉 적극적으로 복합용도 및 다기능 공간 구성을 통한 접근성의 증진 각종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와 주거지역 및 지역사회를 개조하는 것이 도시에서 성별평등 실현의 우선적 과제이다.

이슈브리프

스마트 성장에 대한 수용을 통하여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복합 공간 창출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젠더화된 공간이 낳은 생활기회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능 복합 건물군의 개발과 더불어 그 곳에 접근할 기회와 여건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 컴팩 디자인의 기능 간 연계 속에 돌봄의 공공화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남겨져 있다.

도시 공간을 성 평등 인프라로 만들기

성 평등에 기여하는 도시 공간 인프라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인프라 구성과 함께 공간 조성 과정이 여성의 임파워링 과정과 연계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와 같은 사업이 목적했던 바와 같이 단위 시설과 도로가 노약자와 같은 사회·문화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과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집단에게도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보행으로 최단거리이동이 가능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를 배치해야 하며,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접촉과 공동 활동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의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젠더화된 공간을 돌봄 역할에 반응하기 충분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누구나 균형 잡힌 생활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전한 이동은 근린생활권 내에서 보도와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구중심생활권 및 도시생활권까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할 필요 있다. 여기서 보도와 조도 개선 및 버스 정류장 쉼터 사업을 근린생활권 단위로 함께 추진하여야 보행 여건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운영체계는 모든 권역의 이동자를 고르게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한 역(station) 인증(직원훈련, 접근 가능한 도움요청 장소, CCTV, 조명, 승객 안전 조사)도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상 활동이 집중되는 근린생활권 내에 다음과

〈표 1〉 생활권 내 공공서비스 지원 기능 및 시설

구분	근린분구	근린주구(읍·면·동)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중심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 개방형 돌봄 시설 또는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기관 내 커뮤니티 활동 공간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기관 내 커뮤니티 활동 공간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기관 내 커뮤니티 활동 공간
보행가능 필요시설 (기능연계)	작은 공원, 간이체육시설	영유아 일시보육 공간, 평생학습지원공간, 직업훈련공간	방과후 아동지원공간, 도서관, 여성상담기관, 직업훈련공간	영유아 일시보육 공간, 방과후 아동지원공간, 사회복지관
대중교통연계 필요시설		방과 후 아동지원공간, 도서관, 보건기관, 세대간 공동활동프로그램운영기관, 사회복지관, 여성상담기관	평생학습시설, 사회복지관, 세대간 공동활동 프로그램운영기관	도서관, 세대간 공동활동프로그램운영기관, 여성상담기관

같은 공공서비스 지원 기능 또는 시설들이 필수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신규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기존 공공 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필요 기능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 내 돌봄 인프라 확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린생활권 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며, 근린생활권 내 공공시설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각종 사회 활동 기회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영유아 놀이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일시 돌봄 시설이 근린생활권 별로 1개 이상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시설 지원과 함께 유아 및 어린이, 신체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 도서관, 평생학습 지원시설 등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을 활용한 육아 긴급 상황 지원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무엇에 우선권을 두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입지와 규모가 상이해 진다는 점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또는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문제를 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사회적 공간은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여성들이 일상의 일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기획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의 기반으로 역할하도록 한다. 사회적인 접촉이나 공동의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연 공간을 제공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게 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어낸다. 이는 또한 근린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지역에서 교환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를 각자에게 제공하는 기반이 됨으로써 기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뿐만 아니라 서로 지지하는 공간을 만든다. 공간 내에서 그리고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젠더화된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와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³⁾ 특히, 사회적 공간은 근린으로부터 중심 상권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상점들을 조성하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지역 여성의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촉진시키는 공간 조성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위시설 개선 사업은 여성 편의 시설 설치도 필요하지만, 공공시설이 출산 양육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여성의 자율적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또한, 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구역 단위 사업에 있어서도 이동 관련 사업은 차량 관련 시설 정비보다 보행 동선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화장실, 주차장, 보도정비 등의 물리적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넘어 각종 사업 추진에 지역 여성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사업, 참여의 장애가 되는 돌봄 관련 시설 인프라 정비, 셉티드 반영 안전 인프라와 보행 여건 개선 사업 연계 또한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이런 경향은 네덜란드 주택·도시계획부(the Dutch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의 시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계획가와 개발전문가는 주로 도시개발을 빌당, 상점이라는 것과 투자라는 점에서 생각해왔지만, 도시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공동체 공간을 설계했다. 도시 계획에서 사회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생각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부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응집력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한여성의 삶: 공식지향과 삶의 실제

임 순 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물리적 통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남과 북이 사상·이념을 하나로 하고 사회 전 분야의 법·제도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다고 해도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미완의 통일에 그치고 만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마음의 통합이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여 소통할 때 비로소 한반도 통일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 있은 후 우리 사회에 새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져 가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추세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계기로 하여 한층 더 확산,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과 함께 예상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는 통일을 상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필수 선행과제는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분단이 야기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곧 남북한의 사람들이 통일의 과정에서나 통일 후에 만났을 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미리 서로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북한주민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극심한 사회통제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북한여성의 삶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여성의 삶은 북한체제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삶과 실제에 있어 북한여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공식 지향: '주체의 인생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¹⁾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율성과 적극성, 능동성을 한껏 구현해 나간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 공식화된 '인생관'²⁾에서는 획일주의적인 규범성과 타율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인생관을 인생의 주체로서 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자율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공식 개념화된 '인생관'이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의 준칙(準則)으로서 규범화되어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삶의 보람과 가치는 무엇에 의하여 규정 되는가, 한 생을 값있고 보람 있게 살자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하며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가,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어떤 생활이 사람에게서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이며 그런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에서 규범성과 타율성이 배어 나온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규범적·타율적 삶'을 하나의 준칙으로서 공식화한 인생관은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하는 이른바 '주체의 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곧 삶에서의 주체사상 구현을 뜻하며,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³⁾을 핵으로 한다.

혁명적 수령관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바, 인민대중은 "양심과 혁명적 의리로 수령을 받들어 모실 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사회적 인간으로서 보람 있는 삶의 길, 혁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 삶의 참된 목표를 내세우는 문제, 참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갖추는 문제, 인생행로에서 참된 인간관계를 맺는 문제 등은 결국 수령의 영도를 받는가, 못 받는가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수령을 모시는 것은 참된 삶을 위한 근본 조건"이다. 또한 주체의 인생관은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다. 집단주의적 인생관⁴⁾은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운명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만 개척될 수 있으며 집단을 떠나서 개인은 생존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는 바, 이러한 점에서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관점 및 주장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구호가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다. 개인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 집단주의적 인생관, 주체의 인생관에서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사회정치적생명'⁵⁾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면서 사는 삶이다.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 1) 일반적으로 인생관이란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 따위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 또는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사고체계를 뜻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2) 인생관이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참다운 삶인가, 참된 삶을 어떻게 누려 나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이며, 특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참된 삶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은 어느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가, 어떤 생활을 참된 생활로 여기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바,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서는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함께 집단의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이로써 어느 생명이 더 귀중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p. 31.
- 3) 김창하, 『참된 삶의 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pp. 269-290.
- 4) 학우서방, 『사회: 고급학교 제3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85) pp. 167-169.
- 5) 주체의 인생관에 따르면 인간의 고유한 참된 생명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만이 지니게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빛내고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값 높은 생명이며, 특히 참다운 정치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녀야만 한다. 리경남, 『집단주의적 생명관의 기본내용과 그 확립의 근본요구』, 『철학문집』(평양: 과학백사전종합출판사, 1992), p. 36.

이어가는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 된다.⁶⁾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사업이며, 이는 당·국가로부터 삶의 목적(목표)으로 주어진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 사상수양과 혁명실전을 통한 단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이는 의무화된 조직 생활과 사상교양, 노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약하건대, 위와 같이 ‘수령의 영도’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요체로 하는 주체의 인생관,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하나의 준칙(準則)으로 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삶은 지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북한 문예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는 북한소설에서 긍정인물로 형상화된 여성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이들의 자아인식은 매우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확고한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또한 이들이 지향하는 여성상⁷⁾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다. 이들은 강반석과 김정숙의 귀감적 역할을 본받아 ‘혁명가적 역할’과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애쓰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무난히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당과 수령,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이러한 여성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김정일의 ‘명언’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삶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들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과 수령을 위한 희생, 헌신”이며,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어 사는 데에 삶의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행복의 원천이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에 있다고 생각 하며, 이를 조국에 대한 봉사와 헌신, 영예군인의 반려 자로서의 삶, 노동에 대한 사랑 등으로 구현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북한여성들의 삶은 공식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여성들은 온갖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어떠한 저항이나 불만 없이 조직 생활에 충실했으며,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도 적극 참여 하는 등 집 안팎에서의 주어진 역할 수행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 체제와 제도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국가와 당이 요구하는대로 혁명가로서의 역할과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나가며 평범한 일상 속에 안주해 온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상적 기제로 작용한 것은 거의 평생에 걸쳐 의무화된 조직 생활이다.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조직생활은 획일적·반복적인 사상교양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수용,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심화, 지속되어 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여성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식량난이 지속 되고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가족 단위로 식량문제 해결의 부담을 떠맡게 되면서 여성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다.

6) 김창하, 앞의 책, p. 83.

7) 북한여성들에게는 따라 배워야 할 두 여성이 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이며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다. 북한여성들의 “영원한 귀감”으로 일컬어지는 강반석과 김정숙의 모범적인 역할에 대한 학습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강반석 따라 배우기’ 보다 ‘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 ‘김정숙 따라 배우기 사업’ 등이 더 강화되었다. 북한문헌을 통해 보면 강반석과 김정숙은 남편에 대해 순종적·헌신적인 아내였고, 자식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을 가르치며, 교육에 정성을 다한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의 전형, 곧 전통적인 “조선녀성”의 전형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강반석과 김정숙은 그들 자신이 혁명가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pp. 98-108;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정군』(평양: 인문과학사, 1968), pp. 18-23;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자』(평양: 조선청년사, 1967); 금성청년출판사 편, 『공산주의 녀성혁명가 김정숙선생님에 대한 이야기』(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3); 인문과학사 편, 『혁명의 어머니』(평양: 인문과학사, 1976) 참조.

III. 삶의 실제

가. 집단보다는 가족을 위한 삶: 가족부양 부담과

과도한 노동

□ 가족부양의 부담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국가의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가족단위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됨에 따라 여성들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으며, 이로써 여성들의 삶은 국가와 사회, 집단보다는 가족을 위한 삶이 더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여성들에게 가족부양의 책임이 떠맡겨진 데에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는 등 집안일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적인 성역할 분담의식과 남자가 장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기본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와 같은 성역할 분담의식 및 사회적 통념은 북한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가족부양 부담을 보다 더 가중시킨 현실적·직접적인 요인은 경제난의 악화, 지속으로 인한 공장 기업소의 가동 중단이다. 원자재 및 전력 부족, 설비 낙후 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직장에서도 노임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노동법 규정에 따라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만 했으므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떠맡게 된 것이다.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해 힘쓰는 경제활동은 장사를 비롯하여 텃밭·패기밭 경작, 집짐승 기르기,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 활동 등 다양하며 이들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여성들은 장마당 장사로 적은 돈벌이를 하며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편이지만, 수익이 높은 장사를 하여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는 여성들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또한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성을 도구화하는 여성들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가 제한적이고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극히 어려울 때 매춘은 이념이나 제도를 뛰어넘어 여성들에게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북한여성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 과도한 노동

가족부양의 부담이 증대함에 따라 전통적 주부로서의 역할과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병행해 나아가는 북한여성들의 노동 부담도 정도가 더해졌다고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식량난, 경제난 이래 소수의 부유층 여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여성들의 일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 등 경제활동을 쉼 없이 하면서도 밥 짓기, 빨래, 청소 등의 일상적인 집안일과 남편 시중,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 환자 간호, 빨감 마련 등에 몹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또한 경제난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여성들의 노동 부담은 나날이 더해졌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장사 등 경제활동을 하느라 노동 부담이 큰 북한여성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나 이마저도 조직생활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는 전업주부나 직장여성이나 다르지 않다. 식량난 이후로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⁸⁾ 조직생활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편이라고는

8)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31세부터 55세까지의 일반여성이 가입대상이며, 전업주부인 ‘가두녀성’과 요양 등으로 노동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가입한다.

하나 일상화된 생활총화 및 학습, 노력동원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좀처럼 쉴 틈이 없다. 소수의 부유한 여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집 안팎에서의 과도한 노동에 지쳐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다. 이들의 문화생활은 바쁜 중에 틈이 나면 하는 텔레비전 시청이 고작이다. 그러나 부유한 여성들은 말 그대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긴다. 이들은 배터리 충전을 해서 가전제품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피아노 개인교습도 받고 한국 DVD 시청도 여유 있게 즐긴다고 한다.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력에 부담이 될 만큼의 노동을 하는 북한여성들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노동이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상 1990년대 이래 심화,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북한여성들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영양 상태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이 나빠지며 가족부양의 책임 증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배가된다. 또한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여성들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떨어지고, 영양부족 상태에서의 수태로 인해 유산, 또는 사산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난에 따른 의료보급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잘못된 피임 및 낙태를 시도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중국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피임기구를 잘못 사용하거나 낙태수술은 불법이므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로 낙태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가부장권의 약화와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

□ 가부장권의 약화

일반적으로 북한의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남편 중심의 수직적 관계이며 ‘세대주’라 불리는 남편은 절대적인 가부장권을 행사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가정에서 여성은 남편에 대해 종속적인 지위에 있으며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제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실태는 남존여비사상이 아직도 북한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단위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종래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서 일단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남편들이 장사에도 나서고, 밥 짓기, 청소, 아이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며 아내의 노고를 분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여성들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가부장권의 약화를 시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가부장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에는 식량난, 경제난이 근원으로 작용하였으며,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떠맡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세대주’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이다. 첫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집 안팎을 뛰어다니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고마운 마음에서이다. 둘째, 직장에 다녀도 생활비를 벌어들 수 없는 가장을 대신하여 아내가 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안일과 아내의 장사를 돕는다.

셋째, 식량난 이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여성들이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유사한 사태 발생을 우려하여 집안일과 장사를 돕는 등 아내에 대해 적극 배려한다. 넷째, 주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아내의 일을 도와 가정살림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이다. 가부장권 약화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크게 보면 가부장권이 약화되었다는 의견과 여전히 가부장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부장권이 더 강화되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각 가정에 따라 가부장권의 변화 양상 및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며, 두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감에 따라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의 발언권이 보다 강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이 점차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가족부양을 위해 헌신적·희생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민과 고마움이 근원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과 중국을 오가며 듣고 본 여성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변화의 속도를 더하였다. 북한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는 소설작품에도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곧 식량난 이후 북한의 공식 가치지향에 있어 남녀 동등한 수평적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소설은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발표된 작품들이다. 소설에는 생활고를 겪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집안일을 돕는 남편들의 모습, 경제적으로 무능력

한 남편을 타박하고 핀잔을 퍼붓는 아내, 그리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오히려 아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남편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다.⁹⁾

그러나 수령을 아버지로 한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체제구조가 시사하듯이 아직도 북한사회 전반에는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으며, 따라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생활의식,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에 있어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현상들을 종래의 가부장적 생활의식과 성역할 분담성·고정성의 약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여성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세대주’로 받들고 산다.

□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식량난으로 인해 떠맡겨진 가족부양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과도한 노동 및 건강악화를 초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나가면서 가족의 생계유지는 물론 부의 축적도 가능해지는 등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점차 높아진 것이다. 북한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특히 장사로 주 업종으로 하면서 강화되었다. 여성들은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적·사적인 사회 연결망 활용, 자금조달, 이윤배가, 수지타산에 따른 상품선택 등 나름대로의 장사 수완 내지 요령을 터득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경선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중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상인들과 거래하고, 남자들과

9) 안홍윤, “회초리,” 『조선문학』(2001.8); 윤경찬, “푸른 꿈,” 『조선문학』(2003.2);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2001.5);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2001.9);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참조.

함께 외화벌이라는 명목으로 비법적인 밀수품 밀매 매를 하는 대담성도 키웠다. 여성들은 장사를 해서 가족부양을 하고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달리 하게 되었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르기보다는 국가적 수요 내지 요구에 따라 이른바 ‘혁명가로서의 역할’과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남자(가장)의 경제력에 의지하고 살았던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 능력을 쌓고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북한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식량난으로 인해 본격화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자립능력 제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은 무엇보다도 가족부양이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여성 자신의 의지로 중단하기 어렵다. 둘째, 경제활동량이 증대됨에 따라 가족의 생계유지는 물론 부의 축적도 가능해지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성폭력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셋째, 일부 여성들이 범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나 이윤 추구 등의 비법적 행위는 식량난 이전에 북한여성들이 지녔던 건전한 직업의식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같은 행위는 여성들로 하여금 왜곡된 직업의식을 형성케 할 수도 있다. 넷째,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음식 장사, 또는 농산품·공산품 등의 단순한 물품 거래를 할 뿐 전문지식이나 세련된 기술, 또는 오랜 숙련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종래 북한여성들이 지녀온 직업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IV. 맺음말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세월이 70년 가까이 되었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살아온 그 세월 동안 남과 북의 사회·문화는 적지 않게 이질화되었다. 따라서 서구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 이른바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 살아온 북한주민들의 삶의 모습은 낯설 수밖에 없다. 앞에서 밝혔듯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소통하여 마음의 통합,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질성 극복 및 동질화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이질성 극복 및 동질화를 위해서는 서로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음 자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적 이질성에 대해 이념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며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이질성 수용의 자세이다. 둘째,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인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생활문화에 있어 동질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질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거나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려는 자기중심적 또는 우월적 태도를 지양한다. 넷째,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포애적 관심과 사랑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해 알리고 노력한다. 다섯째,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갖는다. 이는 북한주민들을 내 이웃과 다름없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신뢰할 때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